

## 輸入先多邊化제도 2천년 해제

지난 '78년 처음 도입돼 그동안 對日 무역역조 개선과 국내 산업보호에 큰 기여를 해온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오는 2천년에 완전 폐지된다.

통상산업부는 대내외 무역환경변화와 국내업계의 경쟁력 실태 등 제반여건을 종합검토, 수입선다변화제도를 '99년말까지만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40~50개씩 추가 해제해 나가되 매년 1월에는 대상품목의 경쟁력 실태를 감안해 25개 품목을 해제하고 7월에는 그 당시 무역수지 상황등을 감안, 해제품목수를 신중적으로 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자본재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시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수입선다변화 해제대상 품목에 우선 순위를 뒤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보완시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통산부는 7월 1일부터 현재 162개에 이르고 있는 수입선다변화 품목 가운데 對日 수입증가가 적고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 10개를 적용대상에서 완전해제,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수입선다변화 적용대상에서 해제되는 품목중 전기관련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완전해제 · ( )는 HS번호

△ 전기톱(8508200000)

△ 절연도료, 피복권선용전선(8544111000)

## 수도권 大企業공장 尖端만 허용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대기업의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내 공장신설이 첨단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공단에 대해서도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장신·증설 규제완화 방안을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 발표했다.

행쇄위는 이에따라 국가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첨단업종에 한해 성장관리권역(동두천, 안산, 평택, 김포, 포천등 5개시, 12개군)내에서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종등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기로 했다.

행쇄위는 또 대기업의 수도권내 공장이전 규제도 완화, 도로건설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공장을 철거해야 할 경우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고 이를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수도권공장 건축면적 총량 규제도 완화, 총량규제 대상 공장건축면적에서 식당, 기숙사등 후생복지시설을 제외함으로써 기업

들이 적극적으로 종업원의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 도록 했다.

## 내년 産業技術기반조성 1,430억 투입

통상산업부는 내년에 총 1,430억원을 투입해 기술인력, 기술정보, 연구시설, 표준화, 기술지원등 기술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내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예산 1,430억원은 올해예산 298억 5천만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내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보면 산업기술대학 설립, 기계류부품 설계인력양성사업 등 17개 기술인력양성 사업에 올해보다

236억 5천만원 늘어난 383억 5천만원을 투입하고 지역정보화사업, 업종별 정보화사업 등 6개 기술정보 확산 사업에 7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기술혁신센터 설치, 대학중심형 테크노파크 조성 등 29개 공동연구기반 확충사업에 올해보다 무려 16배 가까이 늘어난 691억 5천만원을 투입하고 공학·기술인의 국제인력교류사업, IMS국제협력 등 7개 국제기술협력사업에 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담보 및 보험사업, 신기술보육사업 등 6개 산업기술지원사업에 177억원을 투입하고 정밀측정기술 표준화, 자본재산업 표준화 등 5개 표준화사업에 7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수출 主導 重化學工業 경쟁력 강화

정부는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수출주도 중화학공업 11개, 중소기업형 경공업 10개, 미래 유망산업 9개 등 총 30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철강·석유화학·조선·정보통신기기·일반기계·가전제품·중전기기·금속제품·금형 등 11개 중화학공업을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의 수요가 1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에는 지원규모를 올해의 25억달러보다 크게 늘리고 대상에 대기업이 생산해 대기업이 사용하는 국산기계를 포함시키며 시제품 개발자금 규모를 올해 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끝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과 같은 생산성 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을 비롯한 특정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의 적용시한을 오는 '9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DNV 인증기관 지정

통상산업부는 외국인인증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DNV를 품질보증체계(ISO 9000) 국내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 ISO 9000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품질인증센터,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평가연구소 등 국내기관 9개와 외국기관 1개 등 모두 10개로 늘어났다.

통상부는 DNV 이외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15개 외국인인증기관도 빠른 시일내에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 인증기관은 아무런 제한없이 국내 기업에 대해 심사를 한 후 인증서를 발급해 이들의 활동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고 감독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주)DNV는 노르웨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 노르웨이 선급협회 한국내 독립법인으로 '92년 한국지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140여건의 인증서를 발급해 왔다.

## 技術開發과제 2천개 선정

내년부터 3년간 2천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가 선정돼 개발과제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21세기 고도기술 산업사회진입에 앞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평균적 기술수준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우선 현재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인 국내 중소기업 기술수준을 2분의 1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97년부터 '99년까지 3,80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소기업과 정부가 공

동으로 부담하는데 이중 정부는 2,400억원을 조성, WTO(세계무역기구)에서 허용하는 범위인 총 소요비용의 75%내에서 개별기업에 직접보조할 방침이다.

향후 3년간 추진될 이 기술혁신 사업은 개별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현장애로기술의 타개와 첨단 고도기술의 중간진입을 위한 실용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평균적 기술수준을 향상시킨 후 2천년부터는 한단계 높은 고도기술 부문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 중세에 기술담보 貸出制 施行

앞으로 신기술이나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이를 담보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은 사업성이 유망한 신기술이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담보가 부족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기술담보대출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운전자금은 10억원까지, 시설자금은 20억원까지이며 기술력 우수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력 평가표를 별도로 마련해 신용평가지 기술력 평가배점을 40점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기술력 평점에 따라 동일인당 최고 3억원까지 연대보증인 없이 신용으로 지원하고 영업점장이 전결토록 여신전결권을 대폭 하부로 이양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성장성 및 사업성이 유망한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업체 가운데 중소기업기술력 평가로 평균 60점 이상인 업체다.

특허권담보부 신용대출은 동일인당 최고 10억원까지이며 본부에서 신청기업의 특허권 등에 대한 사업성 평가후 기술력 평점에 따라 자동 지원 하되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보전후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 우수품질자본재 瑕疵保證

통상산업부는 국내에서 우수한 기계류를 개발해도 수요자가 품질을 믿지 않아 판로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기술품질원의 우수품질(EM)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 기계공제조합이 하자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수품질 자본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는 제조업자가 배상을 하고 제조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자보증 사업기관인 기계공제조합이 배상을 한 뒤 제조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자보증은 제품가격 범위내에서 이뤄지고 보증기간은 2년이며 사업기관은 보증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기금의 이자수입을 사업비로 충당하게 된다.

우수품질마크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사업은 지난 4월에 자본재산업육성대책 세부추진계획의 하나로 확정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2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통산부는 재경원으로부터 배정받은 25억원으로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기금의 50배인 1,250억원으로 올해 예상되는 최대 보증수요 2,500억원(180개 품목)의 절반을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